



## 이재명 대통령, 강소기업 만나다 "잠재성장률 반등·균형성장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1.8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강소·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 등을 만나 경제 산업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8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균형성장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천명했으며 그 중 경제 분야에서는 잠재

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최대 정책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행사에는 국내 최초로 AI분야 유니콘으로 성장한 리벨리온, 군집 AI 무인기 제어 전문기업인 파블로항공, 게임사 시프트업, LS전선 대표 등이 함께한 다점단산업 분야는 아니지만 삼양식품, CI올리브영 등 유통 기업도 참석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더해 지역과 청년 기업인 및 소상공인, 전문가들도 참여해 성공 사례

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토론을 벌인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과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GS, 한진 등 10대 그룹 사장급 인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투자·고용 계획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참석한다.간담회에서는 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및 지방 투자 확대 요청이 이뤄

9일 성장전략 국민보고회…AI·반도체기업에 올리브영 등 유통기업도 참석

靑정책실장, 1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청년고용·지방투자 확대 요청

질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李대통령 "에너지 문제로 국제 혼란…에너지대전환 잘 준비해야"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에너지 대전환을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 혼란을 여러분도 직접 보고 겪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과 맞물려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일각에선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두고도 석유 등 에너지 패권 경쟁이 그 저변에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래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맞춰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이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인공지능(AI) 대전환은 개별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가 됐다.

관련 인재 확보 및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새해에도 코스피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이런 변화의 씨앗을 국민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구체적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토대는 '국민 모두의 성장'이다. 뉴스에만 나오는 거창한 숫자로 나타나는 성장이 아닌, 5천만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와 진전이 중요한 것"이라며 "국가의 성장이 국민 모두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과 비전이 있어도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완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각 부처와 비서관실도 '국민 체감 국정'에 최우선 목표를 뒤야 한다. 국민 삶이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정책발표 전부터도 누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변화시킬지 세밀히 살피고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정 성과는 보고서나 숫자가 아닌 국민 삶의 변화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방·중소·벤처·스타트업·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역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올해가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도록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내외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겠다"고 약속했다.

李대통령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질서…실용외교에 운명"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7일 진행된 중국 국빈방문의 성과와 관련해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8일 평가했다.

전날 밤늦게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협력 강화의 발판을 잘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겠다"며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봉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명시 안한 윤석열 절연 당내 평가 분분 "쇄신안 후속조치 속도"

한동훈 징계 논의' 윤리위 본격 가동…정책위의장·지명직 최고 등 인선

"늦어도 2월 말까지 당명 변경" 소당원 의견수렴 위한 전담팀 구성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와 잘못된 과거와의 결별을 당 쇄신안에 담아 발표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 평가가 분분하다.

당 지도부는 장 대표가 말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표현에 사실상 절연 의지가 내포됐다고 평가하는 반면 친한(친한동훈)계를 비롯해 소장파·비주류 인사들은 이른바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과의 절연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라며 의구심을 보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8일 CBS 라디오에 출연, "오히려 장 대표가 한 포괄적 사과 속에 '윤 절연'의 의미가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절연을 그런 프레임 속으로 끌고 들어가면 우리당을 쪼그라뜨려 극우 정당으로 몰아해체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미 탈당했고 이미 절연됐다. 그런데 또 절연하겠다" 하는 자체가 지금까지 끈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장 대표의 중대한 결단을 응원한다.

과거의 잘못을 분명히 짚으며 혁신의 방향을 제시한 결단"이라며 "당내에서 서로 불필요한 정쟁과 조롱, 비난은 삼가고 함께 갈등의 산을 넘자"고 했다. 비영남권 재선 의원은 "당의 어려움의 시작과 끝은 윤 어게인' 세력 때문이

고 그들과의 단절이 필요한데 그것을 피해 갔다"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까지 합친 보수 대통령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SBS 라디오에서 "'윤 어게인'과의 절연 없는 계엄 극복은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회견 때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며 말을 아낀 장 대표는 하루 만인 이날 당 쇄신안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에 경남 3선 정점식 의원을 내정했다. 정 의원은 2024년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에 임명됐으나 이후 한동훈 당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당시 한 대표에 의해 사실상 교체됐다.

장 대표는 또한 지명직 최고위원에 수도권 원외 호남에 민주당 출신 인사인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을 임명했다.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인사다.

조 신임 최고위원은 민주당 소속 남양주시장 시절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다 2022년 민주당을 탈당, 이듬해 9월 '이재명 저격수'라 불리며 국민의힘에 영입됐다.

친한계에서는 조 최고위원이 2024년 한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당시 '당 대표 후보 사퇴' 축구에 관여했던 점 등에 비해 이번 인선이 친한계를 바라보는 장 대표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계시판 사태' 징계 문제를 논의할 당 윤리위원회 인선을 마치고 윤리위를 본격 가동했다.

지난 5일 윤리위원 7인 인선 발표 하루 만에 3인이 사퇴하자 이날 곧바로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 윤리위원 간 호선을 통해 선출된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과거 김건희 여사 옹호 글 논란 등 적격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도 최고위에서 의결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 체제에서 새로 꾸려진 윤리위가 '당계 사태' 징계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전날 쇄신안 발표 때 '반이재명 정치 연대'를 선언한 만큼 한 전 대표와 '정치적 해법'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 밖에 장 대표는 당 쇄신안의 하나로 언급한 '당명 개정' 추진을 2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 당원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치기 위한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단순한 당명 개정뿐 아니라 당헌·당규에 당 가치를 담는 것 등을 논의하는 기구를 신설할 것"이라며 "빠르면 2월 초, 늦어도 2월 말까지는 당명 변경 (작업이) 잘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 당직자는 "윤 절연'을 말했는지 아닌지로 논쟁할 게 아니라, 장 대표가 쇄신안을 통해 말한 연대 등의 내용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봉 기자

## 김병기 징계절차 장기화에 與 속앓이…윤리심판원 12일 결론낼까

사실관계 확인에 시일 걸리는 듯…"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묶을 순 없어"

논란 지속에 '금 자진탈당' 목소리…'전수조사' 주장에 '여건 안돼' 반론도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의 징계 절차를 두고 속앓이하고 있다.

당내에선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지만,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한 특혜·갑질 등 잇따라 불거진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정 짓기 위해선 '속전속결'로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어사다.

당 윤리심판원은 예정대로 오는 12일 회의를 열어 김 대표 의혹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당일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MBC 라디오에서 "12일 징계가 결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아무리 국민 여론과 당원 요구가 있더라도 개인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도 답답하고, 국민과 함께 애타게 기다리는 중"이라며 "급하다고 해서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 바느질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도 "윤리심판원이 여론재판을 할 수는 없다"며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증거나 진술 등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역시 의혹에 대한 소명 자료

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김 의원은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소명할 게 많다"며 "과거 자료를 다 찾아야 하고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상과 달리 사실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논란의 조기 수습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당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전면에 부각되고,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이 자진 탈당으로 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사안의 중대성이나 계속 나오는 얘기를 보면 윤리심판원 결과가 좋을 것 같진 않다는 예감"이라며 "김 의원이 먼저 결단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다른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진성준 의원은 유튜브 채널 '김여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 의원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선당후사의 결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

원은 YTN 라디오에서 "여러 의원이 김 의원의 결단에 대해 말하는데 김 의원이 잘 듣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치적 책임(원내대표 사퇴)을 졌기에 최종 판단은 김 의원이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며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양한 형태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특검 사안'이라는 보수 야권의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도 "지방의회에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지금 지방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 비실명으로 조사하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다"며 자체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방선거기획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공천 관련 자료는 통상 (선거법 시행인) 6개월 정도 보관하고 파기한다"며 "남아 있는 회의록을 당 차원에서 점검할 수는 있겠지만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얘기하는 형식의 전수조사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경영 기자